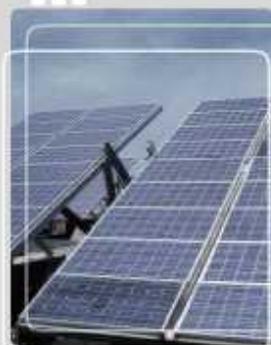


독일 메르켈 총리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독일 총선 결과 요약

II.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주요 공약 및 정책

- | | |
|----|---------------|
| 3 | 1. 경제 및 성장 정책 |
| 5 | 2. 유럽재정위기 |
| 7 | 3. 조세제도 |
| 9 | 4. 사회/노동 |
| 10 | 5. 대외정책 |

III. 메르켈 총리 재집권과 유럽 재정위기 항방

IV.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 | | |
|----|----------------|
| 14 | 1. 對EU 및 독일 수출 |
| 15 | 2. 투자 유치 |
| | 3. 투자 진출 |

요 약

■ 지난 9월 22일 실시된 독일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연합(CSU)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現 총리의 3선이 확정적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무난한 승리를 예고했던 메르켈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경제, 사회, 노동, 조세, 대외정책 등에서 독일이 어떠한 정책을 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존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이 원내진출 실패로 빠지고 대신 좌파 성향의 정당과의 연정 구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메르켈號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반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 및 성장 측면에서는 재정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을 위한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독일의 강점인 중소기업과 창업,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및 R&D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위기 해법으로는 신규 부채 감축, 금융거래세 도입, 유럽중앙은행 독립적 지위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조세 분야에서는 법인세 유지, 재산세 및 상속세 반대 등 이른바 親기업, 親성장을 표방한 세금 인상 억제 기조가 두드러진다. 이 밖에도 외국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정책 개선, 미-EU FTA격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적극 추진, EU 회원국 간 공조체계 강화 등이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 메르켈 총리의 재집권으로 독일 내 획기적인 방향 선회보다는 기존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진출 등 비즈니스 환경 관련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사민당 등 좌파 성향 정당이 연정에 참여할 경우 정책의 강도나 이행속도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EU FTA 추진, 재정위기국의 경제구조 개혁 및 이에 따른 시장 신뢰 회복 등의 이슈가 있으나 독일의 주도로 유로존이 안정과 경기회복에 돌입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유치, 투자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 투표 결과

○ 메르켈 총리, 3선 확정

- 2013년 9월 22일(현지 시간)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기민당/기사당연합(CDU/CSU)이 41.5%의 득표율을 획득, 메르켈 총리의 차기 집권이 확정적
- 기민당/기사당연합은 총 630석에 이르는 연방의회 의석 중 311석 확보

○ 그 외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 확보 현황

- 야당인 사민당(SPD), 좌파당(Die Linke), 녹색당(Buendnis 90/Die Gruenen)은 각각 25.7%(192석), 8.6%(64석), 8.4%(63석)의 득표율 기록 예상
- 기존 연정의 일원이었던 자민당(FDP)과 신생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uer Deutschland)'은 각각 4.8%, 4.7%를 득표, 원내 진출을 위한 최소득표율 5%에 미치지 못함.

나. 쟁점사항

○ 집권여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 실패로 연정 구성 필요

- 메르켈 총리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나 기민당/기사당연합이 단독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함에 따라 연정 구성에 관심이 모아짐.
- 특히 기존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이 원내 진출 마지노선인 5% 득표에 실패,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의 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정 구성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나 큰 틀은 유지될 전망

- 연정을 구성할 파트너 결정과 의견 조율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차기 집권 정부의 정책은 공약을 통해 내세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

1. 경제 및 성장 정책

가. 중점사항

- **긴축재정으로 건전한 국가 재정에 주력**
 -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이 최우선 과제로 차기 임기 중 신규부채가 없는 재정운영을 우선하되 연방 채무의 단계적 감축에 주력하여 GDP 대비 60% 달성
 - 재정건전화 정책이 탄탄한 경제 및 지속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 부채 제동장치 관련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여 준수
-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직원 사회보험 기업부담금(Lohnzusatzkosten)의 현재 수준 유지 및 세금 인상 억제
 - 저금리 대출 확대, 불필요한 관료주의 관행 철폐 등의 행정적 비용 축소를 통해 창업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 적극 지원
 - 중견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지속 추진
- **R&D 지원책 지속 추진**
 - ‘하이테크 전략 2020’을 통해 환경, 에너지, 보건, 식량, 안전, 정보통신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산학연 연구 혁신 활동 지원 지속
 - 현 집권기간 내에 R&D 지원 규모를 GDP의 3%로 유지, 향후 학문과 기술 발전을 위한 최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 동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
- **유럽 내 디지털 성장 1위 국가 목표**
 - 경제 성장의 동력인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특히 컴퓨터 기술, 디지털 학습교육 과정, 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
 - 2018년까지 고속 광케이블 인터넷 확충, 인터넷 TV 활용도 제고,

텔레메디신(telemedicine) 서비스 활용 확대

○ 핵심 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 창출

- 마이크로전자,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고 세계 각국에서 독일기업이 공정한 여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

나. 추진 조건

○ 연정 구성이 관건

- 2009년 10월부터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기사당/자민당(FDP) 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민당이 하원 진출의 마지노선인 5% 이상 득표가 필수
- 그러나 자민당의 득표율이 4.8%로 하원 진출에 실패, 사민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과의 연정 구성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정책 추진 강도와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다. 전망 및 시사점

○ 경제 분야 주요 정책의 변화가 없는 무난한 정권 출범 예상

- 기민당은 재정정책 부문에서 독일의 행보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독일 정부의 부채 감축 조치 도입과 경제 및 고용정책의 성공에 따른 국가 수입 확대의 결과로 분석

○ 독일 및 유럽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전환

- 경제/재정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소비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긴축기조 강화시 일부 전략적 투자분야를 제외하고 성장 지연 가능
- IW 경제연구소는 기민당/기사당연합의 선거 공약이 재정긴축을 지

나치게 중시하고 있어 향후 5년간 10만여 개의 일자리 감소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음.

- 핵심 분야 R&D 지원 강화를 통한 독일 기업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특히 디지털 산업 육성 가속화로 관련 분야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
- 원전폐쇄 정책으로 물가 및 기업 비용 상승 전망
 - 원전폐쇄 추진으로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및 기업 생산비 상승은 불가피
 - 한편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축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대체에너지 및 신성장 분야 육성 및 지원은 계속될 전망

2. 유럽재정위기

가. 중점사항

- 긴축기조 유지
 -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기부양 프로그램 도입에 반대
 - 회원국의 구조 개혁 독려를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개선
 - 유로존 내 경제협력 강화 및 시중은행에 대한 신뢰회복에 주력
- 신규부채 감축과 엄격한 부채 억제장치 준수 촉구
 - 유럽 은행연합(Banking union) 창설에 우호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 반면 유럽 내 예금 보호나 유로본드 도입 등에 따른 채무 리스크의 공동 책임 확대의 경우 자국 예금자가 다른 국가 예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분명한 반대 입장 고수
 - 총선 이후 주요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 추가

국제금융이나 은행연합에 대한 입장 변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금융거래세 등 엄격한 규제 조치 도입

-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주장하며 EU 10개국과 함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 특히 EU 집행위의 감독권 강화, 회원국의 예산 및 재정정책 목표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

○ 유럽중앙은행(ECB) 독립성 확보 및 물가안정 도모

- 유로화 강세와 물가안정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전제조건
- EU 회원국 재정 안정을 위해 ECB의 독립성 및 유로화 보존 필요

○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프로젝트 집중 지원

- 대부분의 재정위기 국가의 높은 청년실업률 타개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EU 차원의 집중 지원 실시

나. 추진 조건

○ EU 회원국별 예산절감 및 신규 부채 감축 노력

- 유로화 안정과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
- 특히 회원국별 개혁과 교육, 연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자체 경쟁력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 독일 국민의 지속적 동의

- 독일 내 反유로존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

○ 다른 회원국과의 공조 및 협력관계 강화

- 재정위기 공동 대응 및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합의 및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이며 특히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
- EU 차원의 청년실업 대책 합의 도출, 금융거래세 도입 관련 세부

방안 등의 분야에서 특히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

다. 전망 및 시사점

- 재집권에 따른 안정적인 정책 추진 및 불확실성 완화
 - 기사당/기민당 연합 재집권으로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재정위기 해결, 유럽 내 복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 선거 공약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그리스 부채 탕감안은 시장 내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일단 거부하면서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입장임.
- 독일과 프랑스 등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전망
 - 리스크가 큰 금융거래나 세금 회피, 이중 과세 등의 문제가 완화되어 역내 금융시장 강화 및 세수 확충이 예상됨.
- EU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뜨거운 감자
 - 회원국별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청년 실업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3. 조세제도

가. 중점사항

- 특별한 세금 인상 혹은 인하 계획 無
 - 상속세 인상 및 재산세 재도입 반대
 - 독일 내 약 1,500개(이 중 70%가 가족기업, 90%가 제조업)에 이르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고용 안정 및 입지 보존이 목적
- 親중소기업 조세정책 도입
 -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조세정책 도입

- 연구 지원용 조세제도 도입,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 등의 조치로 기업 혁신 및 경쟁력 제고 유도
- 첨단기술 부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親성장 기조의 법인세 유지

- 2008년 법인세 개혁 이후 독일의 산업 입지 매력도 유지 위해 노력
 - * 독일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08년 1.1일부터 법인세를 기존의 과세대상 수입의 25%에서 15%로, 영업세 기본세율 역시 5%에서 3.5%로 인하하여 기업의 실효세율이 평균 30% 이하로 축소됨.
- 유럽 내 법인세 조정 지속 추진
 - *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존 안정협약을 위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통합된 법인세율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

○ 국제 협력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세 추진

- 국가 간 협약이나 정보 교류를 통한 탈세 대응 및 세금 부과 추진

○ 자녀공제금 및 자녀수당 확대

- 소득세 정산 시 자녀공제금을 현재 年 7,008 유로에서 8,130 유로로 확대하고 자녀수당 역시 인상

나. 추진 조건

○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관건

- 특별한 세금 인상 및 인하 조치는 없는 한편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실행을 위한 세수 확보가 문제
- 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재정적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비판

다. 전망 및 시사점

- '숨은 인상(kalte Progression)*' 방지에 따라 세금 납부자에 대한 혜택 예상,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혜택 증가

* '숨은 인상(kalte Progression)'이란 소득세율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물가 상승을 보상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 후 소득 인상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으로 고용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못함을 의미

○ 조세 덤핑*이나 탈세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경우 추가 세수 확보 가능

* '조세 덤핑'이란 특정지역 내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조치로 특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낮은 법인세율로 자국 내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

4. 사회/노동

가. 중점사항

- '근면,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적 진보'를 통한 정규직 고용을 목표
 - 기민당/기사당연합은 법적 최저임금에는 반대하나 정치권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 따라서 임금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 고용주와 노사가 법적으로 임금 계약상의 최저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
- 전문 인력 유입 확대 및 이민자 정책 개선
 - 독일 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해외 고숙련 전문 인력과 가족의 이민 확대, 특히 EU 내 전문 인력에게는 열린 기회 제공
 - 이를 위해 행정 규제나 절차 간소화, 시행중인 'Blue Card'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 추진, 고학력 외국인의 이민 촉진을 위한 관청 설립, 공공 부문(교사, 경찰, 법관) 경력이 있는 이민자 수용 확대, 연방노동청과 독일기관의 해외 대표부 및 해외상공회의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 이외에도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어학 교육 강화 등 언어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교육 개선도 병행 추진
 - 이민자에 대한 독일적 가치와 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을 위한 피난소 후원 지속 등의 정책도 공약에 포함

나. 추진 조건

-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민 동의 필요
 - 독일 내 반외국인 정서 확산 방지 노력 및 이에 적극 대응
 - 문화·종교적 다양성 존중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보급 강화
- 이주민들의 종교·문화적 전통이 독일의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용 불가
 - 다양성은 인정하되 독일 법질서 및 가치 준수
 - 특히 이슬람협회와의 밀접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
 -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과정 확대 보급 및 정착 필요

다. 전망 및 시사점

-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사회 통합의 중요성 증대
 - 독일 내 반차별주의 및 '관용'의 사회 풍토 조성
- 외국인 전문고용인력에 대한 열린 이주 정책으로 유입 확대 전망
 - 독일 내 부족한 IT 전문 인력 유치
 - 특히 유럽 재정위기 및 높은 실업률로 고전 중인 일부 EU 회원국의 전문 인력의 유입 확대 지속될 전망

5. 대외정책

가. 중점사항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조속 시행으로 미국과 EU간 협력 증진
 - TTIP 협상을 조속히 추진, 2015년 협상 타결 기대

- 유럽과 미국이 경제공동체를 넘어선 가치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양측의 성장 도모와 고용 개선 도모

○ EU 회원국 간 신뢰 및 협력 강화

- 유럽 내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원국별 신뢰와 협력이 중요
- 특히 프랑스와 독일 간 파트너십 강화와 新EU 회원가입국 중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인 폴란드와의 외교 확충에 주력*

* 독일은 1991년 8.21일 3개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발족된 독일·프랑스·폴란드 간 협력위원회(Weimarer Dreieck)를 통해 3개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함.

- 장기적 측면에서는 유럽 군대 창설 및 공동 안보전략 개발 추진

○ 터키의 EU 가입은 여전히 반대

- 터키의 EU 가입 전제조건 미충족이 반대 사유이나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나. 추진 조건

○ 회원국별 이해관계 조율이 TTIP의 원활한 협상의 관건

-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영화, 음악 등 문화 부문이 협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 전망 및 시사점

○ TTIP, 미국과 독일 간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 예상

- 세계 최대 경제권 간 협정 추진으로 미국과 독일 간의 협력관계와 교역 역시 강화될 전망

○ TTIP 체결은 유럽 내 고용창출에 기여

- EU 집행위측은 동 협정 체결로 유럽 내 연간 40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0.5%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

- 긴축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자원 확보 필요
 - 일부 전략적 투자분야를 제외하고 성장세 지연 예상
 - 그러나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독일과 유럽의 경기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소비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독일연방재정부는 향후 기민당/기사당연합 재집권 시 공약 실천을 위해 신규 부채 증가가 불가피, 추가 자원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제기하고 나섬.

- 유로존 재정위기국가의 자체적인 긴축 기조 촉구 강화
 - 현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국의 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촉구
 - 그리스 부채 탕감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구제금융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축소 가능성도 존재
 -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채무 공동화, 엄격한 긴축정책 추진에 따른 유로화 유지 등 기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
 - 유럽 11개국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세수 확대 및 투기 성격의 단기투자 방지 효과 기대

- 향후 유로존 위기 대응 전략에 변화 가능성 시사
 - '13년 9월 메르켈 총리는 TV 인터뷰를 통해 유럽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나 이를 반드시 EU 집행위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언급
 - 이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EU 재정연합을 촉구한 바 있는 메르켈 총리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며, 향후 EU 회원국 간 합의가 주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
 - 이는 新재정협약 등을 통한 EU 집행위의 권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의 위기 관리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독일-프랑스 간 긴밀한 정책 공조 필요

- 新재정협약 개정, 유로본드 도입, 유럽중앙은행 역할 등의 이슈에서 좌파인 올랑드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가 큼.
- 新재정협약에 대해 프랑스 측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독일은 동협약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
- 향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메르켈 총리의 입장 역시 강경하기 때문에 주요 이슈와 관련한 프랑스와의 의견 차이 조율과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1. 對EU 및 독일 수출

- 유로존, 불안심리 완화로 완만한 회복세 예상
 - 총선 이후 유로존 위기 해결 구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시장의 불안심리 완화로 경기지표 개선에 따른 독일 및 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기대됨.
 - 위기국의 구조 개혁으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타 유로존 경제권도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 기업의 대 독일 및 EU 수출에 호재
- 對EU 및 독일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현 선거 공약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대외 교역 관련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총선 결과가 우리 기업의 유럽과 독일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미-EU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득과 실은 엇갈릴 것
 - 한국은 양 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한 상태이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전 세계 교역량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의 교역 확대에 따른 세계 경기 활성화로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재 수요 증가와 해외 생산 한국 기업에 실익이 될 것으로 예상
 - 비관세 장벽완화나 규범 통합 및 상호호환성 제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
 - 반면, 한국의 주 교역국인 중국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및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가능
- 미래지향적 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 기회 발굴이 필요
 - 텔레메디신을 비롯한 의료정보 시스템, 모빌리티,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SW 및 IT 융합기술 등 미래 新성장산업 관련 전략

- 적 기술개발과 수출시장 확대가 중요
- 독일이 고속 광케이블 인터넷 확충 등 IT 인프라에 전폭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므로 한국의 IT 노하우를 토대로 관련 시장에 활발한 시장 진출 기대
- IT를 기존 산업에 가미한 IT 융합 분야(특히 자동차)도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요하는 분야임.

2. 투자 유치

○ 유럽재정위기 해결이 관건

- 현재의 경기 회복 국면이 안정적으로 전개될 경우 경영 및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대한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 예상
-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신규 프로젝트를 유보할 가능성이 상존

3. 투자 진출

○ 우리기업 투자진출 환경과 여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

- 독일 총선이 직접적인 변동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 재집권 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에 따른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 역시 지속 전망
- 특히 기업의 세부담 증가 억제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에 투자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일부 독일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기회로 활용 가능

- 자금난에 처해 있는 현지 기업에 대한 M&A 가능성을 적극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 총선 관련 독일 주요 언론·기관·기업의 분석 및 전망

※ 독일 기업 및 주요 기관은 공식적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어 언론 등에 알려진 분석과 전망을 위주로 정리

-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 연정만이 유럽 내 구조개혁 및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최선의 결과임.
- **베스트벨레(Guido Westerwelle) 외무부 장관**
 - 연정이 성사될 경우 지난 '05~'09년 집권기와 같이 우선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약 3%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경제전문가 라펠휘스헨(Bernd Raffelhueschen)**
 - 사민당(SPD) 선거 공약 실천시 1,884억 유로, 기민당/기사당연합의 경우 1,726억 유로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IW(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eln) 경제연구소**
 - 사민당(SPD)의 선거공약 실천에 따른 연간 비용을 '18년까지 590억 유로, '30년까지 790억 유로로 추정, 현 정부 집권기 대비 성장률이 0.7%~0.9% 감소, 약 40만 개의 일자리 감소 전망
 - 반면 기민당/기사당연합 집권시 연간 120억 유로의 비용 소요 및 0.1%의 성장률 감소 예상
- **DIW(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경제연구소**
 -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소득세 공약에 따른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 등의 영향으로 추가 세수가 65억~75억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공약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호엔하임(Hohenheim) 대학 부르크호프(Prof. Dr. Hans-Peter Burghof) 교수**



작성자

-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과장
- ◆ 선진시장팀 이연주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56

독일 메르켈 총리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김성수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9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